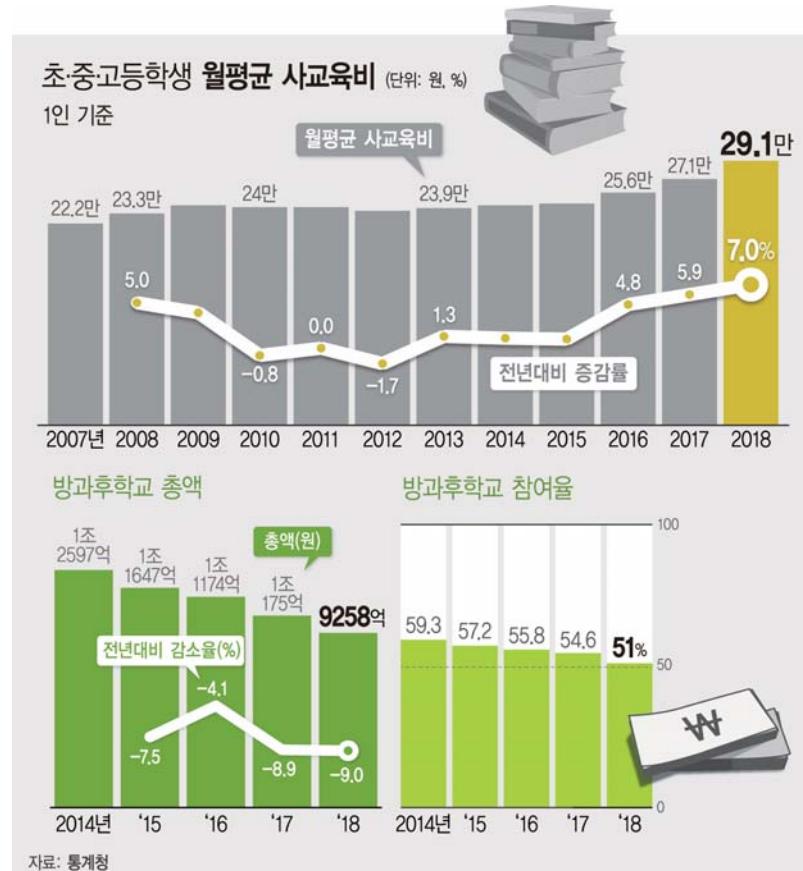


# 초·중·고 사교육비 6년째 '껑충'...작년 역대 최고

통계청,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월평균 사교육비 29만원...전체 73%가 사교육 받아  
맞벌이 일수록 사교육비 ↑...경제활동 안 해도 참여  
50% '학교수업보충' 목적...사교육비 절반 학원비



사교육비가 6년째 오르고 있다. 지난해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나온 후 최고치를 찍었다.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 맞벌이 가구도 증가해 한들만 낳아 잘 키우자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방과후 학교나 EBS 교재 구매 비용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사교육비의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작성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한 초·중·고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1년 전(27만2000원)보다 1만9000원(7.0%) 올랐다. 물가 상승 분이 포함된 명목 금액 기준이다.

2012년 1.7% 감소한 이후 6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증가률은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2008년

이래 가장 높다.

이재원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참여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참여율이 높아 참여 시간도 증가하면서 사교육비가 높아졌다"며 "기구당 자녀 수가 두 자녀를 모두 사교육을 받게 한다면 한 달 평균 10만8000원을 사교육비로 쓰는 것으로 계산된다. 중학생은 44만8000원, 초등학생은 31만9000원을 월평균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증가율을 보면 고등학생이 7.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이 3.7%, 초등학생이 3.9%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000억원이었다. 1년 전(18조7000억원)보다는 4.4% 늘었다. 총액은 6학년까지 있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가 8조55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5조9348억원), 중학교(4조9972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1년 전과 대비해선 각각 5.2%, 3.9%, 3.5% 증가했다.

사교육 수강 목적으로는 '학교 수업 보충'이 49.0%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선행 학습(21.3%), 진학 준비(17.5%), 보육·

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통계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 참가자가 2017년 24만5305명에서 지난해 26만287명으로 증가한 영향"이라며 "예전에 비해 육아휴직자가 늘고 유아기 근무시간 단축제 등 유연근무제도가 확산되고 있어 맞벌이 가구 등에서 최근 전까지 학원에 보내던 주제가 줄어든 영향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가구에서 학생 1인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0만7000원으로 1년 전(28만6000원)보다 7.4% 늘었다. 외벌이(27만9000원)나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11만8000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참여율 역시 74.6%로 외벌이(72.1%)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41.1%)에 비해 높았다.

자녀 수가 적을수록 아이 한 명에 투자하는 사교육비가 높았다. 자녀 수가 1명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4000원이었고, 2명인 가구는 30만8000원, 3명인 가구는 22만5000원이었다. 참여율 역시 같은 분포를 보였다. 1명인 가구가 75.6%, 2명인 가구가 74.6%, 3명인 가구가 66.5%로 각각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은 초·중·고 학생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만 놓고 보면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 38만2000원보다 1만7000원(4.6%) 오른 금액으로 초·중·고 등학교에서 모두 올랐다.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4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 자녀를 두 명 둔 가구가 두 자녀를 모두 사교육을 받게 한다면 한 달 평균 10만8000원을 사교육비로 쓰는 것으로 계산된다. 중학생은 44만8000원, 초등학생은 31만9000원을 월평균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증가율을 보면 고등학생이 7.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이 3.7%, 초등학생이 3.9%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000억원이었다. 1년 전(18조7000억원)보다는 4.4% 늘었다. 총액은 6학년까지 있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가 8조55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5조9348억원), 중학교(4조9972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1년 전과 대비해선 각각 5.2%, 3.9%, 3.5% 증가했다.

사교육 수강 목적으로는 '학교 수업 보충'이 49.0%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재원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학교 수업 보충'이 49.0%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선행 학습(21.3%), 진학 준비(17.5%), 보육·

(5.5%) 순이었다.

사교육비가 늘어난 반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비용은 2015년부터 4년째 줄어들었다. 지난해 유·무상 방과후학교 비용 총액은 9258억원으로 1년 전(1조175억원)보다 9.0% 감소했다. 참여율 역시 51.0%로 2014년부터 5년 연속 감소세다. 1년 전 대비 감소율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7.1%, 중학교에서 -5.2%, 초등학교에서 -1.1%였다.

사교육을 줄이고 자율적 학습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EBS 교재를 구입한 비율도 1년 전 (16.9%)에 비해 1.2%p 감소한 15.7%에 그쳐 5년째 줄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8.3%, 8.6%로 1년 전보다 1.3%p, 0.4%p 줄었다. 반면 고등학교는 구매비율이 35.0%로 높은 편이었다.

이번 조사는 1486개 학교 1491 학급에 속한 약 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5월, 7~9월 간 월별 사교육비를 각각 5~6월, 9~10월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하지 않은 월의 사교육비를 추정·합산해 연간 통계가 산출됐다.

뉴시스

사교육비 매년 최고치 경신

"문제없다" 교육부 더 문제?

7기차 대응책 현교육정책 판박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전년도 2017년보다 8000억 원 증가한 19조5000억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12일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응계획으로 7기차 대책을 함께 내놨지만, 하나같이 현행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이후 발표한 '2022 대입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단순화를 지속 추진해 입시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2 대입개편방안은 올해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은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을 30%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즉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현행 교육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교育부 김성근 학교정책 실장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미래 사회에 맞춰 전인적 발전과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책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반면 입시경쟁이 업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 민감해진 상태"라며 "정책변화로 인한 불안감을 제일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지원'에는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상경력·자율동아리 획득과 요소를 제한하고 소논문은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간 원탁토론회나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해 학생부 관련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에는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 기반을 구축하고 초등학교는 이달 중 한글과 사회연산 등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고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교 유정신화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과후 자율동아리 활성화 등도 세부과제로 포함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원비 불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 이상인 2%이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교습비 편법 징수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을 통해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